

## 경제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화폐개혁, 배경과 파급효과

### 입 장 태

(북한연구센터 소장)

### 이번 화폐개혁의 주요 특징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은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대1'로 교환해 주고, 1세대당 구화폐를 10만 원까지만 교환해 주되, 추가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5만원씩 더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Daily NK, 2009.12.3). 여기에 추가 10만원은 '1000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며, 나머지는 은행에 적금 형식으로 예치해 추후에 신화폐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화폐개혁에서 핵심은 교환금액의 상한선이다.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한달 평균생활비가 15만원~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상한선을 넘기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자 북한당국은 화폐교환 방침을 세 번이나 수정, 통지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화폐교환비율 이외에 외화, 임금, 주요 상품 및 정부채권과 유가증권 등의 교환비율이 공시되지 않고 있어, 화폐개혁의 시행작업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이는 화폐개혁 계획이 사전에 노출될 경우 효과가 축소될 것을 우려한 당국이 전격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북한주민들과 시장의 반응

전국적으로 화폐교환이 시작된 12월 2일, 구권화폐에 대한 가치가 폭락하면서 구권화폐 기준의 물가와 환율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양이 정부가 교환해주겠다는 규모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구권화폐의 많은 양이 휴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2일 기준으로, 미화 100달러에 북한돈 36만원선을 유지했던 환율이 60만원으로 2배 가깝게 증가하였으며, 쌀 가격은 무산의 경우 1kg당 2,500원이었던 것이 50,000원으로 20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통강냉이는 32배, 두부콩은 20배, 들깨는 1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및 상점의 모든 거래가 일체 중단된, 일종의 '경제적 공황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화폐개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이 시장의 상인계층이라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건을 팔고 북한화폐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화폐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해준 시장의 공간에서 국가에 꼬박 꼬박 세금을 바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쌓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된 상황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민들의 경우도 타격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심각한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특히, 당장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국지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 화폐개혁의 '경제적' 의도

좋은 벚들에 따르면(2009.12.03), 화폐교환에 관한 내각결정(제423호)이 하달되었는데 여기에서 화폐교환을 실시하는 이유로,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을 위하여”, “경제관리체제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최근 시장활동의 확대를 통해 화폐화 현상(‘화폐관계’)이 지나치게 확산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관계’가 침식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전반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의 복구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상당 수준 구조화되어 있어서 화폐개혁과 같은 폭발력 있는 조치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화폐개혁의 일차적인 목표는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교환 상한액이 가구당 1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주민들의 구매력 및 상인들의 자금동원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시장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아마 북한당국 내부에서는 신권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에 더 많은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당국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국가차원의 경제회복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는데, 최근까지의 대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은 물가 안정을 통한 정부의 국가경제에 대한 관리능력을 회복하겠다는 점이다. 2002년 ‘7·1조치’ 이후 계속되어 온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화폐유통량의 축소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 파급효과와 전망

일단 화폐개혁을 통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화폐 유통량의 많은 부분이 사장됨으로써 정부의 채무가 감소한 효과가 있으며, 신권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



긴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시장의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주’는 외환 거래와 외환 보유를 선호해 왔다는 점에서 타격이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거래자금을 상실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는 기회를 잡은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타격을 덜 입은 돈주를 포함한 특권계층에 대한 일반주민들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시장은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구축된 시장을 통한 이익창출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상인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질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당국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화폐개혁을 계기로 상인들과 일반주민들의 외환 선호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외환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시장환율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국은 일반주민들의 외환보유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외환 암시장의 활성화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번 화폐개혁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음성화가 심화되는 등 불법적인 시장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화폐개혁이 침체된 공식경제부문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신권발행을 통해서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대규모 건설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강화하는데 보다는 전시용 건축물에 주로 투자할 경우 북한경제의 회복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성장 효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